

# 경쟁과 협력의 통상정책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

— 목 차 —

1. 통상환경의 변화
2. 「신경제」의 지향과 통상정책의 방향
3. 통상정책의 주요 과제
4. 주요 국가에의 통상정책
5. 무역업무의 역할

## 1. 통상환경의 변화

우리는 지난해 2,000억불의 무역고를 기록하여 세계 12대 무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서비스무역, 기술협력, 해외투자, 외국인투자도 더욱 활발해지는 등 통상활동이 다변화·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통상환경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회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 1) WTO체제의 출범

먼저, 최근의 가장 큰 통상환경 변화는 WTO체제의 출범이다.

UR협상 결과로 2차대전후 50여년간 국가간 「협정」으로 존재해왔던 GATT가 「기구」로 대체되었으며, 세계경제는 80여년만에 1차대전 이전과 같은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재통합을 이루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앞으로 1~2년내에 중국과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 세계경제는 명실상부한 「세계」무역기구체제 아래 대통합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WTO는 자유·공정무역을 촉진시키고 기업활동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세계무역·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인하, 시장개방조치와 같이 계량가능한 효과는 물론 경쟁촉진에 따른 경제효율증대와 같은 계량하기 어려운 긍정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개별국가의 의사결정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 국제경제

주체중에서 국제기구와 다국적기업의 발언권이 높아지는 반면에 개별국가는 국제규범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 2)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병존

다자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역주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대체적 또는 선택적이라기 보다는 상호보완적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병존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진다.

종래에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이나 자유무역지대(free-trade area)와 같은 지역주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주로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를 계량하여 득실을 판단해 온 경향이 있다. 이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의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추구하는가 혹은 대체적 역할을 추구하는가.

주) 본고는 지난 1월 19일 무역센터 무역클럽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이 밝힌 올해 주요 통상무역정책 방향이다.

다시 말하면 다자주의를 강화시켜 주는가 혹은 약화시키는가에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역의 차별적인 조치들이 마찰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협력 추진에 다소의 문제점도 있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성립된 지역협력체는 일반적으로 다자주의를 보완해 주고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역협정은 다자협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이슈들의 국제적 논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통상 이슈의 국제적 해결방식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주의 다자주의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3) 대외진출중심의 양자간 통상활동

각국은 자국의 상품·서비스·투자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시장개방에 중점을 둔 양자 통상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1970~80년대 초반 하더라도 각국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 출범 이후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규제를 시도하기 보다는 기업간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 등 협력을 매개하는 보다 생산적인 통상활동에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각국이 양자관계에서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면 다자간 협력도 더욱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 4)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의 개막

「시드니선언」이후 정부는 세계화를 위한 전략과 시책을 개발하여 왔다. 금년은 세계화의 원년으로서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발전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또한, 금년은 지방화시대의 원년이기도 하다.

지방정부들은 각기 여건에 맞는 통상시책을 수립·추진하게 될 것이다.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긴밀한 협조와 적절한 역할분담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 5) 남북 경제협력의 여건 호전

남북경제협력은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양측의 경제적 실리를 도모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작년 10월 북미간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북한 핵문제 해결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미 핵협상 합의에 따른 북-미 관계의 개선은 미국, 일본, EU 등 서방 선진국 기업의 대북 진출을 촉진시킬 것이며, 이로 인한 우리의 남북경협 환경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신경제」의 지향과 통상정책의 방향

### 1) 「신경제」의 지향

종래 우리 경제는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발전메카니즘의 근간

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문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지시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문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않도록 통제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경제발전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며 사람들의 의식도 민주화 됨에 따라 이제 그같은 발전메카니즘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70년대 후반에는 민간주도의 경제운영이, 80년대 초반에는 경제자유화가 추구되었으나 이 당시에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만 민간주도로 운영되거나 자유화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후 80년대말부터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었으나, 정치적 민주화는 오히려 경제발전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민주주의가 가져다 주는 개인의 자유가 개인적 욕구분출과 집단이기주의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었다.

「신경제」는 경제발전 메카니즘의 근간이 정부의 지시와 통제로부터 국민의 참여와 창의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민주주의가 가져다 주는 개인의 자유를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 각자의 참여와 창의로 연결하여 권위주의체제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을 포함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게 함으로

써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 2) 통상정책의 방향

통상산업행정분야에서는 참여와 창의를 통하여 강하고 효율적인 기업이 많이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신경제」건설을 위한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키는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상품 및 서비스무역, 기술 및 투자협력 등 여러가지 형태의 국가간 거래에 있어 외국과 「경쟁」하는 적극적 통상정책과 아울러, 보다 장기적인 국익을 도모하고 인류공영을 위해 「협력」하는 호혜적 통상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오늘날 국가간 또는 기업간의 교류관계는 흔히 경쟁과 협력의 게임(competitive-cooperative game)으로 이해되고 있다.

자기가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수인의 역설(Prisoner's Dilemma)에서 보듯이 모두가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기 때문이다.

특히, 1930년대의 무역장벽 쌓기식 일방주의가 2차대전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이래 협력이 있어야 경쟁도 가능하다는 점은 국제사회의 상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양자간 협력이 국제관계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이지만, 최근에는 지역·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소국일수록 지역협업체 또는 다자기구에 의지할 필요성이 있

다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으며, 이제 유수의 대국들조차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계경제구조가 다극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서로 협력하여 「경쟁의 틀」을 짜게 되는 것이다. 기업측면에서도 비슷한 형편이다. 세계적인 기업도 혼자서 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한 여러형태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경쟁자가 바로 협력의 파트너가 되는 사례가 많다.

우리의 경우는 지금까지 「경쟁」에 치중한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초기 단계에는 교역상대국이나 국제기구가 우리의 수출일변도 정책을 문제삼지도 않았고, 저소득국의 개발전략인 것으로 널리 수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무역과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양자간이나 다자간 논의에서 책임과 역할분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경제적 이유나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요구에 수동적 자세로 대응(reactive)해 온 것이 사실이다.

세계 12대 무역국가로 성장한 지금 우리는 우리경제의 현실, 나아갈 방향,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능동적이고 전향적인(proactive)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개방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개방경제 체제를 추

구해 나갈 것이다. 수입자유화는 높다고 하지만 외국상품의 국내시장진출은 특별법에 의한 규제, 복잡하고 투명하지 못한 절차 등 여러형태로 제약받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가능한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도 실질적으로 내국인대우를 받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의 투자유인을 위하여 일부 특혜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내국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분야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특혜나 차별을 모두 철폐하고 실질적인 동등대우를 제공하도록 제도개편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종래, 우리는 국내산업보호라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국제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통상조치를 취한 나머지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례가 있었고, 강한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지키지도 못할 개방약속을 하였다가 훗날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다. 정부의 개방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양자·지역·다자간 협력채널을 모두 동원한 전방위의 입체적 통상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는 마찰해결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에 더 중점을 두면서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켜 나가

기 위하여 정부는 첫째, 수출에만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관심도 수용하여 수입시장개방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수출에 있어서는 양적 성장도 계속해 나가면서 수출구조를 고도화하는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며, 수입에 있어서는 국제협력 측면, 대외로부터의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개방의 필요성, 소비자선택을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방된 통상국가를 지향해 나갈 것이다.

둘째, 상품과 서비스무역의 확대 뿐만 아니라 투자·기술 등 산업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역활동이 단순하고 기초적인 형태의 경제 교류인데 비하여 산업협력은 장기간에 걸친 고도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 한편으로는, 산업협력이 촉진되어야 무역이 지속적으로 신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규모에 비하여 투자활동이 극히 미미한 실정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셋째, 지역협력체 및 다자간 등을 통하여 선진국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우리의 대외진출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후발개도국의 우리나라시장 진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보호주의의

편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정부는 양자협상이나 WTO나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불법·부당한 조치를 시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일부 제한된 국가의 제한된 품목에 대하여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를 일반특혜관세(GSP)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에 관한 다자·양자차원의 논의에 있어서, 당분간은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이와 동시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후발개도국에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OECD가입을 계기로 보다 광범위한 개발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3. 통상정책의 주요 과제

#### 1) 무역제도의 선진화

현재의 무역제도와 절차는 2,000억불 시대의 무역규모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관리 및 통제위주로 운영되어 기업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에 제약이 되고 기업의 부대비용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수출지원제도는 대외통상마찰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무역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기업의 무역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대외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는 직접적인 수출지원제도를 국제규범상 허용되는 간접적인 수출지

원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① 수출입승인제도를 현재의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금년중에는 수출승인제도의 개편에 중점을 두고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수출제한품목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병행하여 수출승인 및 사후관리 면제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② 정부간·민간업계간 협정이거나 수출업체간 과당경쟁방지를 위한 수출제한품목(838개 품목)을 전면 검토하여 국제협정에 의한 품목은 2004년까지, 자율규제 품목은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제한을 철폐해 나갈 것이다.

③ WTO협정상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출지원제도(무역금융, 수출손실준비금 등)를 이행기간내에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대신, 그 보완대책으로서 무역어음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출보험과 연불수출금융을 확충할 계획이다.

#### 2) 수출경쟁력의 강화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교역환경이 개선되어 수출확대를 위한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지만, 수출경쟁력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호기를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는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것이며,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세계일류는

바로 세계일류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수출경쟁력은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상품을 만들고 효과적인 마케팅활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산업정책외에 수출활동을 위한 간접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① 유망수출상품을 선정하여 품질, 디자인을 개선하고 해외마케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작년에 일류화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일류화업체를 선정하고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② 「서류없는 무역」을 이룩함으로써 간접비용을 대폭 줄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출승인 및 통관 단계까지 시행하고 있는 무역자동화사업을 화물관리·수입통관·항만물류업무까지 확대하고 무역자동화망을 업종별 산업정보망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③ 「얼굴있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의 자기상표와 디자인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기상표의 해외출원지원 및 외국기업에 의한 우리상표의 도용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3) 수입의 자유화

우리는 그동안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의 수입자유화와 관

세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제2의 일본」, 「배타적 보호주의국가」등 신뢰받는 개방형 통상국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상당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과잉보호를 해온 데에도 기인한다. 이제 우리는 일관성있는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투명성도 높여야 할 것이다.

① 대외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현행 101개(수입자유화율: 99%)의 잔존수입규제품목 중에서 WTO협상결과 및 GATT/BOP합의('89년 10월)에 따라 쇠고기 등 8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규제품목을 '97년 6월말까지 연차적으로 자유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수출입공고상에는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으나 개별법(49개)에서 수량규제적 추천제도를 유지하고 수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금년 상반기중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할 것이다.

③ 수입선다변화품목을 과감히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선다변화제도가 그동안 국산화율 제고, 수입선전환 등에 기여해 온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적 구조로 인하여 이와 같은 방어적 대일수입정책으

로는 무역역조개선에 한계가 있음도 경험하여 왔다.

우리는 '94년부터 매년 10%씩 다변화 품목을 해제하여 '98년까지 절반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기존방침을 제검토할 계획이다. 금년 상반기중에 204개 잔존품목에 대해 품목별 특성과 국산화 수준, 경쟁력 실태, 그리고 해제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변화 품목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할 예정이다.

### 4) 외국인투자의 적극적 유치

정부가 지원·육성해야 할 기업이 소유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가, 아니면 영업활동 영역을 불문하고 내국인이 소유하는 기업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고용·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 내국인 소유기업이건 외국인 소유기업이건 자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러한 입장에서 세계 각국은 예외없이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술축적이 미흡하고 각국의 기술보호정책으로 인하여 선진형 기술도입이 어려우며, 자체개발을 통하여 국내기술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가 중요시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단순조립형·노동집약적 산업기지로써의

매력을 상실함에 따라 외국인투자는 '88년(12.8억불)을 정점으로 하락추세에 있다.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적 비중을 볼 때 '93년 GNP 대비 0.3% 수준으로서 영국(2.5%) 등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싱가폴: 4.7%, 대만: 0.7%)이나 후발개도국(중국: 13.3%)에 비해서도 낮은 실정이다.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최근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히 첨단산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외국인투자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 예시제에 따라 금년초에 우리부 소관 액체연료 및 가스연료 소매업을 비롯하여 총 44개 업종을 추가로 개방하였는데(외국인투자자유화율: 90.6%)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하여 '97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자유화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의 금융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해외단기차입 허용범위를 투자금액의 100%까지 넓혔는데, 금년에는 고도기술산업분야에 있어서 5년 이상의 산업차관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 평동과 천안 제3공단에 외국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저가로 공장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법제와 관행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외국인학교나 외국인전용 아파트의 건설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 주재원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③ 외국인기업의 애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한 외국공관 및 국내진출 외국기업 및 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년 10월에 1차로 실시한 바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실태조사를 금년부터는 매년 실시하여 국내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 경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④ 현재까지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기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지방정부들은 경험과 정보가 부족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므로 중앙정부와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기관이 지방경제의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 대상업종을 선정하여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금년부터 본격 가동예정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하여금 지방기업의 수출산업

화와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KOTRA 지방무역관, 무역협회 지부 등에 지방 통상무역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5) 해외투자의 활성화

GATT체제가 국경을 전제로 상품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제한적 경쟁의 시대였다면, WTO체제는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과거 GATT체제하에서 기업은 라이벌기업에 비해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갖추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었지만, 이제 WTO체제하에서는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를 갖추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생산판매, A/S망의 구축 등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의 지구촌 전략이 요청되고 있으며, 여기에 해외투자의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GNP대비 해외투자액은 1.7%로서 선진국(5~10%)이나 경쟁국인 대만(10%)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세계화의 중심요소가 되는 해외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활동의 지구촌화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① 해외투자 제한기종을 과감

히 줄여 나갈 것이다.

현재 중요기술이전, 과당경쟁 방지 등을 위해 20개 업종에 대하여 해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중 나염, 폴리에스테일 감량 가공, 편조업 등 우리부 소관 7개 업종에 대하여는 늦어도 금년 7월부터 해외투자를 전면 자유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부동산투자 허용범 위도 확대하고, 투자금액에 관계 없이 신고만으로 모든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② 해외투자기업의 금융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을 작년의 2,800억원에서 금년에는 4,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특히 이중 일부를 중소기업 전용자금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투자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보험의 해외투자 부보범위를 현재의 비상위험에서 신용위험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③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진출지역별로 조직화하여 외국의 부당한 무역·투자조치 및 규제 등에 대하여 현지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진출기업들의 모임(가칭 「한국해외진출기업협의회」)을 구성하여 무역과 투자 등 각종 대외거래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후 정부간 통상협상을 통해서 해결토록 할 예정이다.

④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들이

그간 지적받아 온 현지에서의 노사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무역협회 부설 국제무역연수원에 해외 파견 근무자에 대한 현지문화·상관습 등의 교육프로그램과 노무관리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금년초에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6) WTO협정의 이행과 후속협상

우리는 선발개도국으로서 국제경제질서와 국제규범, 혹은 「국제경쟁의 틀」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만들어 갈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력을 갖춘 대국들과 양자협상방식에 의해서만 통상현안 해결을 도모하는 것 보다는 WTO체제와 같은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국내법령과 제도를 WTO협정에 일치하도록 개선·보완함으로써 WTO체제가 견고하게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WTO협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48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며, 이미 작년 정기국회에서 대외무역법 등 33개 법률을 정비하였다.

또한, 반덤핑 등 무역제도와 보조금을 포함한 산업지원제도(정비대상: 56개)도 WTO협정에 부합하도록 이행기간내에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WTO협정상의 금지보조금 철폐계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인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의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80년대 후반부터 다자차원에서는 물론 양자협상에서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적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미국이 UR이행법안을 마련하면서 보조금분야에서 우리나라에 개도국지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어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금명간 본격화될 개도국지위 졸업논의에 대비하여 정부의 입장을 정립하고 다자·양자협상에 대비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각 분야별 졸업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등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 해운·기본통신 등 서비스분야의 양허협상, 우회덤핑에 관한 협상 등 국가간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협상이 종결되지 못한 분야는 '95년중에 후속협상이 속개될 것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고, 각국의 무역관련규범이나 제도, 이들의 UR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우리의 통상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

## 7) 새로운 국제통상 의제에의 대응

UR협상이 종결된 이후 다수의 새로운 통상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WTO내에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키로 함으로써 「무역과 환경」문제는 정식 의제화되었

으며, 그 외에도 노동기준, 경쟁 정책, 투자, 지역주의, 통화금융 정책, 개도국 특례문제 등이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거론되었다.

몇가지의 새로운 통상이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중 환경, 노동권보호, 투자, 경쟁정책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될 의제로 압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새로운 국제 무역의제에 대하여 다차차원에서 논의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이슈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일부 부담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WTO나 OECD 등에서의 다차논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분야에서의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육성 등의 대책과 같이 여타 의제에 있어서도 범정부차원의 대책반을 구성하여 이들 이슈들의 국제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 8) OECD에의 가입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밝힌 대로 '96년말까지는 OECD에 가입할 계획이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경제질서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고, 선진국의

경험 및 정보를 활용하여 국내 제반 경제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멕시코가 작년에 OECD에 가입하고, 현재 시장경제의 초기단계에 있는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박 등 동구 4개국이 OECD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OECD에 가입할 경우 서비스 교역 자유화 및 대외자본 이동 자유화 의무, OECD회원국으로서의 정세운영수칙 등 우리 경제가 단시일 내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세계화를 향한 국민적 합의와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에 비추어 볼때, 향후 OECD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시 예상되는 자유화 부담은 우리의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3월말 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한 후 OECD제규정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금년 하반기부터 OECD와의 가입협약에 착수하여 당초 계획대로 '96년말까지 OECD가입을 차질 없이 실현하도록 할 것이다.

### 9) 지역협력의 강화

앞서 언급한 대로 지역주의가 지나치게 배타적 성향을 갖지않는 한 세계무역 자유화를 촉진시키게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현재 어느 지역경제 블록에도

속해 있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APE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89년 출범이내 6년에 걸쳐 상당한 발전을 해 온 APEC은 작년 11월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역내 무역자유화 목표연도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이제까지는 느슨한 형태의 협력체에서 벗어나 앞으로 지역협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PEC이 개방된 지역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역주의가 경제블럭화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개방된」 지역주의가 실현가능한 지역협력의 틀인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태지역에의 정치·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APEC의 성공적인 발전여부가 안보·외교·경제성장에 중용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정부는 Bogor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해 무역자유화의 대상, 추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무역진흥」, 「산업과학 및 기술」등 분야별 협력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APEC내의 소지역협정인 NAFTA,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 EAEC(동아시아경제회의), CER(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하여도 향후 APEC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록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아울러 북미지역의 중요성을 감안, NAFTA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 최대 교역규모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제3의 교역 파트너인 EU는 '94년 1월 EEA(유럽경제지역)로의 발전, 금년 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의 가입 등 날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의 현장 유지적인 통상관계에서 탈피하여 경제협력강화의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10) 통상지원체제의 강화

앞서 언급한 「세계경제와의 조화(경쟁과 협력)속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방적 통상 국가의 지향」이라는 통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하부구조(infrastructure)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하부구조로서는 정보체계, 전문인력, 홍보 및 실행기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① 통상정보 지원체계를 효율화해 나갈 것이다.

오늘날의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해외통상정보의 확보여부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론 기업의 해외 진출계획의 성공여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구나, 최근들어 국제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투자협력, 기술교차이용(크로스라이센싱), 전략적 제휴 등 산업 및 기술협력에 대한 해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각종 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각종 통상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유통시키기 위하여 유관기관간 상호 정보 교류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국별로 국가정보, 무역·투자·서비스 및 기술관련 정보를 종합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상정보의 일괄지원체제(one-stop-service)를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② 기업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다양화·전문화되는 통상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통상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우선 무역협회내의 국제무역연수원에 세계화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3개 과정(현재 2개 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민간분야의 통상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차원의 통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제통상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전문직위를 지정·운영하고 인사상의 우대방안을 강구하면서 해외주재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파견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상·무역관련 전담연수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③ 국가이미지 및 통상·상품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이미지는 국제시장에서 무형의 자산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 상품은 낮은 국가이미지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품질수준에 비해 20~30%싸게 팔리고 있는 반면에 일본제품은 좋은 이미지 때문에 20~30%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92년부터 추진해 온 품질한국(Korea for Quality) 홍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기업의 해외홍보활동을 뒷받침하고 국가이미지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업계 등 민·관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중장기 해외홍보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갈 것이다.

④ '62년 설립 이래 「무역입국」 시대에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주도해 온 대한무역진흥공사(KOT-TRA)의 기능과 조직을 「통상입국」 시대에 맞게 무역 및 투자협력 전담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도 종래의 상품수출지원 기능외에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유치, 산업기술교류, 기업간 전략적 제휴 등 기업의 세계화를 뒷받침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 11) 남북경제협력의 지원

남북경제협력은 양측간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남북경제의 활력 회복과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이 도모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정부는 북미간 핵협상 타결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업계가 건의해 온 기업인 방북, 위탁가공 활성화

화, 시범투자사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민족내부 거래원칙과 상호보완·호혜의 바탕위에서 남북 양측의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남북경계 협력을 추진하되, 남북관계의 개선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은 위탁가공교역을 더욱 활성화하고 실현가능한 시범투자사업부터 추진하여 남북 상호간 신뢰와 경험을 쌓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한 직교역체제로의 전환, 투자보장, 상사분쟁 조정, 산업재산권 보호 등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주요 국가에의 통상정책

##### 1) 미국

미국은 우리의 제1의 교역상대국으로서, 자동차·반도체 등 수출주요품목의 대미 수출비중이 특히 높기 때문에 수출비중(22%) 이상으로 중요한 시장이다.

또한, 미국은 우리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원천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국가로서 미국의 첨단기술과 우리의 생산기술을 결합하는 상호보완적인 산업협력도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형성된 우리의 통상정책방향과 이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여타국과의 관계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의 대미 통상정책

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미국시장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지난해 회복세로 돌아선 대미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현지 유통시장 진출, 유망진출업종 발굴, 전시회 개최 등 시장진출을 위한 장단기 전략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차원의 업종별 협의회와 작년에 설립된 한미산업기술협력재단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중에는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협력사업도 환경설비·광통신 등을 중심으로 전문화해 나갈 것이다.

최근 한미 양국간 통상관계는 무역수지 균형추세를 바탕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양국간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일부 통상현안도 발생되고 있다.

정부는 양국간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 또한 WTO 및 APEC 등 다자기구에서 협조체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2) 일본

일본은 교역 및 투자협력의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쟁력 확보에 직접 기여하는 기술제공국으로서 최인접국이라는 지정학적 잇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통상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한일 양국간의 교역은 지난해

수출이 18%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수입이 24%나 증가하여 대일적자 규모가 100억불을 초과함으로써 역조 시정이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일수입의 역제가 아니라 수출을 늘림으로써 확대균형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대일 수출주요품목에 대한 경쟁력 실태를 조사하여 업계의 시장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일 수출전문업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근본적인 대일 역조시정을 위해 최근 일본업계가 엔고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해외조달 및 생산을 확대하고 있음을 활용하여 시설재·부품분야의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일 테크노마트 개최, 기능공연수 및 전문가 초청지도 등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한 양국간 기술교류촉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3) 중국

중국은 이미 '93년부터 우리의 최대 해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94년에는 양국 교역규모가 최초로 100억불을 넘어서는 등 경제교류가 급신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선진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어서 대중국 투자에 따른 부메랑효과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메랑효과보다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면서 우리의 대중국 진출기반을 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진출기반의 확보·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중국의 교역·투자제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시정하기 위한 통상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중 통상장관회담, 무역실무회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국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북경·상해 등 주요도시에 Korea Business Center 건립을 추진하고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여 대중국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면서, 업종별·지역별 시장 개척 조사단 및 투자환경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우리 기업의 교역 및 투자진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양국간 산업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업협력위원회 및 항공기·자동차·전전자교환기·고화질TV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금년 상반기중에 개최하여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원자력발전분과위원회의 설치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4) EU

EU(유럽연합)는 '95년 1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랜드의 신규가입으로 서유럽에서 북유럽에 이르는 인구 3억 7천만명, 총 GDP 7조 4천억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일 뿐 아니라, 통합시장으로서 교역과 투자 촉진을 위하여 각종 규제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역외국가들의 EU 진출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EU 국가들은 자동차·항공·기계·환경 등 여러분야에서 세계 최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그동안 미국·일본에 편중되어 온 우리의 교역 및 기술협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EU 국가들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진출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그동안 통상마찰 해소에 주력해 오던 한·EU 통상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다혜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영국·독일·프랑스 등과 양국간 산업협력위원회를 활용하여 산업기술협력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 5) 아세안

아세안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무역흑자권역이자 3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섬유·조립금속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들의 주요 진출기지가 되어 왔다.

앞으로도 아세안시장의 성장잠재력과 저가노동력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진출 필요성은 높다. 다만, 저가활용이라는 정형화된 투자패턴 보다는 현지의 동태적인 투자수요 변화에 주목하여 입지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함이 바람직하다.

최근들어 고임금 및 인력관현상이 발생하고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선발 아세안국가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투자구조를 보다 고도화·다양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6) 러시아

러시아는 당면 경제난 타개를 위해 첨단기술 보유국으로서는 유일하게 공개판매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서방 선진국들로부터 도입하기 어려운 각종 첨단기술과 기계·소재 및 부품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하기 위해 한·러 기술협력센터 운영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러시아 극동지역에 100만평 규모의 나훛트카 한국전용공단 건설사업을 비롯해서 사하가스전 공동개발 및 모스크바 Trade Center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가 양국정부의 지원하에 추진중에 있다.

러시아는 현재로서는 교역대상국으로서 요건은 완비하고 있지 못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교역확대 가능성이 크므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 7) 중남미

'90년대들어 중남미 각국의 수

입개방정책 및 우리의 시장개척 노력에 힘입어 우리의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구나, 금년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4개국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 출범을 비롯하여 안데안공동시장(ANCOM), 중미공동시장(CACM),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등 여타 중남미 국가간 지역협정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마이아미에서 개최된 「범미주정상회담」에서 2005년까지 범미주 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에 합의함으로써 중남미시장의 잠재적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한 점재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들 지역과 교역위주의 협력관계에서 벗어나 투자·기술협력 등 다각적인 경제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소지역 그룹별 경제환경을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출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5. 무역업계의 역할

20세기 후반기에 우리는 두가지 커다란 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념경쟁을 유발했던 동서냉전체제의 붕괴가 그 하나이고, 경제적으로 2차 대전후 지난 47년간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 온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WTO체제가 출범한 것이 다른 하나이다.

WTO체제는 다자간 무역질서의 총화로서 70년대 후반 이후 보호주의로 치닫던 세계무역질서를 자유주의로 전환시킨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이와 함께 세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간의 지역주의와 대외진출에 초점을 맞춘 쌍무주의가 병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적으로는 지방화시대의 출범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와 새로운 역할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통상환경의 변화속에서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의 목표를 「세계경제와의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키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데에 두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일관성 있고 책임감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양자·지역·다자관계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선·후진국간 이해조정 역할을 해 나가는 한편, 세계경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다져 나갈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통상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른 시책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우선, 통상이 「대외경제」문제로서 대내외 거시경제정책 또는 산업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튼튼하고 효율적인 기업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감안한 통상활동을 하고, 대외 통상여건을 감안한 산업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세계화의 침범으로 다시 태어났다. 통상무역행정은 세계화의 침범중의 침범역할을 해나가기 위하여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지만, 「신경제」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통상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

정부가 대내외적인 게임의 규칙을 만들지만 경제활동의 주역은 기업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인들께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무역인들은 WTO체제하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상황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변해야 하지만 기업도 새로운 경쟁환경에 맞는 기업체질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리스트럭처링 또는 리엔지니어링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려는 노력이 더욱 확산되어야 하며, 능률을 저해하는 기업관행들이 속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무역인들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노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여 사전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양자간 협의 또는 다자간 규범에 따라 다해적

차원에서 우리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두가지 경우 모두 특정기업에게는 부담을 줄 수도 있으나 개방의 대상인 산업이나 우리 경제전반의 체질을 강화시켜 주는 가장 효과적인 「경쟁력 제고시책」중의 하나인 것이다.

무역인들은 세계와 경쟁하겠다는 자세로 개방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무역인들은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가진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세계일류기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

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원이 기업 목표 아래 합심하여 산업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기업가는 창의와 모험정신을 가지고 세계일류에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며 모든 기업 구성원의 창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가 더이상 직접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없으며, 또 이러한 지원이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도 어렵다. 각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관건인 것이다.

넷째로, 우리 기업간에 전략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간의 소모적이고 불미스런 마찰이 서로의 경쟁력에 상처를 준 사

례들이 적지 않았다.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우리 기업간에 상호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협력관계가 널리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무역업계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시한번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무역규모 2,000억불의 대업을 이룩하기까지 무역업계가 보여준 각고의 노력에 대하여 치하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통상입국」을 위한 전진의 대열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 불편애로사항 신고센터 운영

### 1. 목적

업계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통상산업부 및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제반 불편사항을 신고·접수 받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세계화에 걸맞는 봉사하는 통상산업 행정 구현

### 2. 신고자

업계 또는 민원인, 산하기관 임직원

### 3. 신고대상

- 통상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불편·애로·비리사항
- 기관운영, 민원업무의 제도개선 사항 등

### 4. 신고절차 및 관리

○ 신고는 FAX, 우편, 전화, 방문 등 신고자의 편의에 따르되, 실명은 6하원칙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

○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접수 및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

○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함

### 5. 신고내용의 조치

○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감사관실에서 관련국 및 관련부처,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개선되도록 하고, 개선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반드시 신고자에게 문서로서 통보

### 6. 설치일 : '95. 2. 24

### 7. 신고처

통상산업부 감사관실 (전화 503-9419)